

국정감사NGO모니터단

137- 878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길 131-2 우면빌딩 Tel. 02) 523-8760~6 Fax. 02) 585-9228 총괄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국회내 모니터단 사무실(겸 화상모니터실) : 국회본청 250호실 Tel. 02) 788-2621~2 Fax. 02) 788-2623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10(18-3) 국정감사 중간평가

막말과 파행은 있었지만, 국감 자세는 양호 -- B학점

◆ 일부 상임위(행정실)의 불공정·무원칙·비민주적 국감모니터링 방해로 고발한다 ◆

《 모니터단의 이념·구성단체 및 모니터링의 기간·방법 》

- ① (여야를 넘는 중립성) 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단장 김대인)은 270개 단체의 연대기구로 소위 진보와 보수단체가 함께 하고 있으며, 회원단체가 아니라도 읍저버 형식으로 참여하여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난 12년 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
- ② (모니터 방법과 범위) 모니터단 홈페이지([www. goodlaw.org](http://www.goodlaw.org))에 올려놓은 의원님의 자료, 각 정당 홈페이지, 의원님 개별 홈페이지, 언론과 방송, 국회방송에 나오는 자료 등을 종합모니터링하고, 감사장 현장모니터링만 아니라, 국회본청(250호실) 화상모니터링, 국회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감기간과 그 직전 직후의 국감관련 활동(자료)만 평가합니다. (단, 최종평가지 같은 점수엔 출결 등 평소의정활동 사항도 고려할 예정임)
- ③ (다양한 단체들 모임) 지부만 260개, 200개, 150개나 되는 전국규모의 단체회원과 모니터교육까지 받은 605명의 대학(원)생을 포함 1천 여명이 온·오프라인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여성, 소비자, 환경, 노동, 장애인, 언론, 교육, 헌법, 법률, 납세자, 산업정책, 부패척결, 유권자, 공명선거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NGO활동가와 교수, 변호사, 학자, 전문자격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국정감사의 다섯가지 발전상 (중간평가)

- ① 건국60년만에 처음 국감장에서 민사분쟁형 형사고소 근절대책 제시
- ② 심야 자정까지도 책임감있고 성실(?)한 국정감사 실행
- ③ 다수 상임위에서 각종 게이트(비리의혹 제기)보다는 민생·정책국감에 치중한 점
- ④ 정당의 주요당직자와 다선의원들까지도 국정감사에 열심히 참여
- ⑤ 공정한 사회 구현 노력 — 불공정·비리·특혜 질책·대안제시

(국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제가 5천만 전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국회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열심히 준비한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대충 몇마디 하고 나간 의원들에게 채찍을 할 수 있는 자유민주국가의 주권시민임을 실감했다. [국정감사모니터위원])

※ 이하 자료는 NGO모니터단 홈페이지 (www.goodlaw.org) 의 국감 공지사항을 참조바람

2010년도 국정감사, 감사자세 “양호” , 성과 “의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감 중간평가

I. 국회(18-3) 국정감사 전반평

- 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단장 김대인)은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의 전반까지 대체로 ‘양호’(학점으로 보면 ‘B’학점 수준—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중간평가 ‘B’학점임—단, 지난해 최종종합평가는 C+학점이었음)했다고 평가한다.
- ② 제헌헌법에 근거를 두고 1949년 최초로 실시된 이래 연례였지만, 1972년 박정희 정부 유신헌법을 통해 국정감사권이 삭제되었다가 1988년 16년 만에 다시 국감이 재개된 이후 매년 파행을 겪으면서도 점진적으로 충실해 지고 있는바, 2010년도(180-3) 국정감사에서 소위 ‘게이트’(대형 비리의혹사건) 등이나 여·야간의 논란이 있는 4대강사업 등에 대한 공방보다는, 매년 70만명이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게 하고 있는 남고소문제와 국가형벌권 남용이라는 고질적인 과제에 대한 획기적인 (민사분쟁형) 고소·고발 근절대책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물가안등문제, 저출산고령화문제, 세금문제, 불공정 시정문제 등 민생문제에 집중한 국정감사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 10월 8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구지검 국정감사에서 연간 60~70만명의 억울한 당사자를 만들기 있는 현실에 대해 "고발, 고소 남발은 검찰이 대책마련에 실패한 것"이라며, "고소, 고발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장을 반드시 2장 제출하도록 하고 민사재판 소장처럼 피고인에게 송달되도록 해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것은 60~70만명의 억울한 당사자들의 인권과 권리구제는 물론, 고소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어 수사력 낭비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함.
- ③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예년과 같이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공직 비리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정감사의 증인출석 등이 이루어지 않았고, 말 없는 배추, 산낙지, 쇠고기 세트 등 애꿎은 농수산물만 국정감사에 불러 나왔는데, 국정감사 중 고질적인 증인 불출석 문제 등으로 국정감사의 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 대부분 국정감사를 방관·무시를 하였던 여·야당의 주요 당직자와 다선의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장에 좌정하여 성실히 정책점검 및 송곳질의를 하여 존경과 신뢰를 받은 반면, 일부 상임위원회 행정실 직원들은 서비스의식도 민주주의식도 없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모니터위원들에게 전혀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국감모니터단’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모욕·훼손·권리침해를 자행, 위원장이 대신 사과까지 하게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는바, 반드시 국회운영위원회 감사시에 그 책임자와 함께 지적되고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제18대 국회 제3차년도 국정감사 중반까지 여야간의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당직자의 국정감사 태업 등이 사라지고 민생현안에 대한 조명이 있었으며, 일부 국정감사위원의 품격 없는 말씨만 고친다면 국정감사의 본래적인 기능인 예산통제 기능, 입법기능,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순기능적인 국정감사로서 국민을 위한 정책감사로 진일보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II. 위원장과 감사위원, 국회를 지탄받게 한 상임위 ‘행정실’의 만행

— 국감NGO모니터단 모니터링 방해실태를 규탄하며, 시대착오적 행태는
대국민보도와 국감백서 등에 영구기록됨 —

1. 9월 30일(금) 퇴근시간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행정실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특정보수 ‘B’단체에게 각각 1석의 모니터석을 배정한다는 상임위원장 결정이 있었다는 유선통보를 받음. → 10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21명 전원에게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 지적·시정요구했지만 방해여진은 계속됨. (10월 11일에도 방해·모욕함)
2. 9월 30일(금)과 10월 4일 국감첫날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행정실에서 사전양해나 통지없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문의 양식을 트집삼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소속 회원단체마다 개별적으로 방청신청하라고 하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문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10월 10일 저녁 행정안전위원회의 요구대로 개별단체 22개 단체명의로 방청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안위 행정실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채 22개 단체의 모니터 신청을 묵살하고 있음.
3.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의 모니터석 제한 :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4좌석을 흔쾌히 배려했던 국토해양위원회가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좌석을 제한하여 사실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서 모니터위원회에 대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국감당일 아침에 신청한 인원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며 모니터링을 방해함.
4.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위원 통지를 하고, 국정감사장에 들어간 국정감사모니터위원이 (특정 B단체 특혜방청으로 인해) 좌석이 부족하다고 국정감사장 모니터석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10월 11일에도 방해·모욕함)
5. 10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 행정실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인적사항(소속과 주민번호)가 담긴 모니터위원신청 통지공문을 휴지통에 버렸다고 막말을 하며 모욕하였으며,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정 B단체에게 방청을 허가하고 있으나, 우리 모니터단 소속 20여개 개별단체의 모니터신청엔 편파적·불공정하게 묵살하고 있음.

Ⅲ. 국회(18-3) 국정감사 전반의 특징

정부 부처 등 5백16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2010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1일까지 총 638시간 4분간 시행되었으며, 국감중간까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음— 국감의 ‘주역’이랄 수 있는 제1야당의 ‘당내선거’로 예년에 비해 국감준비가 대체로 미흡하였고, ‘4대강’등 이미 국감이전 쟁점의 재탕이라는 신선도·긴장감이 떨어진 국감이라는 중론임.

1. 빅 이슈(Big Issu)가 조명받지 못한 국정감사

- (1) 국토해양위의 4대강사업 점검은 자료지연 등으로 대강 대강
 - 자료제출 지체로 1시간 이상 지연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야당의 국감시간 연장 시위 충돌 (10월 8일 국토해양위원회 부산 국감)
 - 임신부 비유에 대한 사과논쟁으로 정회 (10월 12일 한국도로공사 국감)
 - 위원장의 이른 맨손 산회 선포에 대한 항의회견 (10월 13일 경기도 국감)
- (2) 천안함 규명은 감정싸움으로 변질
국방위의 2일차 국방부 국정감사장(비공개후 싸움, 다음날도 파행계속)
- (3) 국무총리실 사찰논란은 증인 불출석으로 ‘허탈’
법사위의 서울고검·지검 등 국감장 (국감당일 불출석 통보)
- (4) G20 회의 개최 속에 묻혀 가는 국정감사
국감후반은 더욱 국민의 이목이 G20회에 집중될 것임 (여·야, 특히 야당의 분발로 정책국감 살려야)

2. 빅 이슈보다 시급한 생활·민생문제와 그 대책이 조명된 국정감사

- (1) 채소값 등 물가안정대책
농림수산식품위를 비롯하여 전 상임위원회마다 ‘배추’가격 논쟁
- (2) 저출산 고령화 대책 — 저출산문제의 해결을 세금우대 전략도
- (3) 기상이변 홍수 대책
 - 1) 기상청 국정감사에서의 기상이변 대책
 - 2) 서울시 국정감사에서의 폭우응변 대책
- (4) 병역비리 근절대책
인기가수 MC몽 사건을 계기로 병역비리 문제에 대한 근절
- (5) 햇살론, 서민금융 대책
- (6) 무상급식, 교육비리 조명 — H초등학교 사태
- (7) 빈번한 세제개편 문제
- (8) 재판과정에서의 판사의 막말·고압적인 태도

- (9) 집시법 개정 논란, 종편·미디어랩 논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은 이슈가 국감장에서 조명되고 언론에 공개됨.

3. 공정사회 관련 문제의 이슈화

- (1) 공정인사에 반하는 특채문제
- (2) 공정보직에 반하는 장성 자녀들의 군부대 꽃보직 문제
- (3) 부장검사의 그랜저 사건에 대한 감싸기 불공정 처분
- (4) 라웅찬 신한은행 회장의 차명계좌 1000여개 논란
- (5) 공기업 직원 자녀들의 학자금 과다 지급
- (6) 체육진흥공단 낙하산 인사문제 등

4. 다선·중진 의원들의 소신있는 성실한 국정감사

- (1) 두분 국회부의장의 성실한 국정감사 참여는 모범적
(정의화 부의장 — 국방위 국감장, 홍재형 부의장 — 정무위 국감장)
- (2)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다선의원들도 국감에 열심
 - 1) 조순형 최고다선의원의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선전
 - 2) 이낙연 전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의 보건복지위에서 고령화시대 고독사문제
 - 3) 국회부의장 출신 이용희 의원은 법사위에서 형사보상금문제등 인권조명
 - 4) 김학송 전 국방위원회장의 국방위 국감활동
 - 5) 서병수 전 기획재정위원장의 기획재정위 국감활동 등 고무적 국감분위기

IV. 국회(18-3) 국정감사 전반의 파행

(대체로 파행위원회가 모니터단에 적대적이었음)

1-1.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의 만성적 파행

지난해 만성적 파행으로 지탄을 받아온 교과위가 10월 6일부터 상지대 문제와 관련한 증인채택 논란으로 진흙탕 싸움만 계속하다 1시간여 만에 감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게도 적대적 방해)

1-2. 교과위(위원장 변재일)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감에서 피감기관장 행사 참여로 지연 : 서울시교육청 박노현 교육감은 10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 참여로 인해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국정감사는 오후 1시로 연기됨

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의 피감기관 준비소홀로 인한

파행 :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재탕 업무보고가 문제가 돼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

3.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의 감사위원간 감정싸움으로 인한 파행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된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동성 한나라당 간사의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 민주당에서 사과 요구로 파행

4-1. 국토해양위(위원장 송광호)의 자료지연 파행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의 자료지연으로 파행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방해)

4-2.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의 10월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국토해양부 국감시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의 발언에 대한 야당의 사과 촉구로 시작 전부터 파행 (임신 5개월 임부와 낙태)

4-3. 국토해양위원회의 경우, 파행은 아니지만 국정감사 조기 산회로 인해 야당의 시위행위와 기자회견도 부산과 경기도에서 있었음.

5. 기타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도 일부 정회가 있었음.

(박희태 국회의장이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것은 국감의 충실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함. (지난 2년간 김형오 전 의장이 수립해온 국감중 해외순방 자제 관행을 다시 무너뜨림))

V. 국회(18-3) 국정감사 전반에서도 여전한 문제

1. 고질적인 증인불출석 문제

"증인 불출석으로 적지 않은 상임위가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증인들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증인 불출석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국회 경시 풍조로 이어지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박희태 국회의장 10월 7일 '국회사무처의 대화에서'

- (1)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7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불출석
- (2)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인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유선기 KB금융 전 경영자문역과 조재묵 국민은행 사외이사 등 8명이 불출석.
- (3) 10월 4일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외교부 특채 파동 감사에서 주요

증인으로 지목돼 출석 해야하는 유명환 전 외무장관이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 (4) 10월 5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명환 전 장관은 야치 쇼타로 전 외무차관의 초청으로 일본 도쿄대 등에서 특강을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 (5) 유종하 전 외통부 장관은 아이티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자연맹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출석거부
- (6) ‘전핏대’로 국정감사장에서 이름을 날렸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신병 치료차 출국했다는 이유로 출석거부
- (7) 친구 딸 특채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ASEM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해 국정감사에 불출석
- (8) 걸그룹 카라 및 f(x) 소속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신병으로 입원)

2. 피감기관, 증인의 답변태도

- (1) 질의순서가 조금 전에 바뀌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기획재정부장관
- (2) 노무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하여 ‘답변할 수 없다’는 지방국세청장
- (3) 천안함 회의에 관련 ‘청와대에 물어보라’는 국방부장관
- (4) 엄정한 국정감사장에서 대놓고 조는 피감기관 배석직원

3.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부실논쟁 — 매년 계속되는 문제

- (1) 검찰이 국감자료 요청을 아예 무시하거나 부실하게 제출(법사위 소속 의원 전체를 보면 검찰의 자료 회신은 18%에 불과) 제출한 자료도 "답변할 수 없다"는 식의 응답이 대부분임.
- (2) 국토해양부 장관이 4대강 관련 요구자료가 8112건인데 8055건을 제출했다.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없다고 반박했으며, 이 문제로 본격적인 국감 진행이 지연됨.

4. 공기업 등의 방만경영 및 비리 여전

- (1)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수협중앙회가 ‘비리백화점’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공적자금을 투입받고 있음에도 ‘자기몫 챙기기’는 여전한데다 낙하산 인사, 이종구 수협중앙회회장의 개인 용도 예산 사용도 문제로 지적됨.
— 10월 11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국정감사
- (2)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직원용 사택 587세대 가운데 257세대를 매각하면서 마련된 278억여 원의

- 매각대금에 21억 8000만 원을 보태 300억원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직원에게 연리 2%의 주택마련자금으로 대출해줬다는 지적
- (3) 직원들 40%가 연봉 1억 이상을 받는다는 한국거래소의 경우엔 2009년 자기개발휴가 7일과 경로효친휴가 3일 등 특별휴가 제도를 만들어 연차휴가보상금으로 1인당 6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지적
- (4)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13억 90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
(업무 대신 공부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 평가를 받고 돈을 받아감)
- (5)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올 5월까지 총 4억 원을 사용내역과 목적을 알리지 않고 유용했다고 지적됨.
- (6) 농협중앙회는 2005년 이후 성과급 1조5575억원, 특별성과금 2938억원 자기개발비 3723억원, 자녀학자금 1308억원, 명예퇴직금 1972억원 등을 지급한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받음 (유흥업종, 실내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으로 분류된 곳에서 카드사용액이 1년8개월동안 8억6000만원에 달함)
- (7) 한국전력과 한전 계열사들은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268억원을 과다지급했다고 지적됨 (한전은 규정에 없는 휴가제도를 운용하면서 휴가보상금으로 106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
- (9) 10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사내복지 지출을 했다고 지적됨.
- (10) 교직원공제회는 무분별한 투자와 부실한 출자회사 운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됨.
- (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비 낭비와 연구기관장들의 도덕적 해이 등도 지적됨

5. 감사위원(국회의원)의 준비부족, 중복질의도 여전

- (1) 열심히 하는 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반면에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의원들도 너무 많아서 안타까웠다. 본인의 질문은 멋지게 잘 준비해서 하지만,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는 관심 없다는 듯이 질문 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의원 중에 아직도 큰소리 치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질의에 임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국정감사모니터위원회]
- (2) 중복질의가 너무 많다. 장시간 이석 때문에 앞에서 이루어진 질의내용에 대해 똑같이 묻는 의원도 있었다. 국회-피감기관이라는 큰 구도가 되어야할텐데, 국회의원 1인-피감기관 구도가 되어 국회의원 각자가 자신의 성과를 올려야하는 것처럼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 앞서 발언한 내용 중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뒤에 발언하는 의원들이 무의미하게 따라 하면서 자신의 질의시간을 채우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 [국정감사 모니터위원회]

VI. 일부 파행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국감 다섯가지 발전상

1. 매년 60만명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민사분쟁형 고소사건 근절대책 제시

10월 8일 대구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3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국회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은 만성적인 고소·고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소·고발의 획기적 근절을 위해서 고소장 부분을 상대방에 주는 방안을 적극 제시함.

2.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정까지 책임감있게 성실(?)한 국정감사 진행

2009년과 같이 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시간이 증가하였고, 자정무렵까지 감사가 진행되거나,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충실한 국정감사를 하고, 아직 전체 상임 위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위원들이 시종일관 국정감사장에 좌정(坐定)해 국정감사에 성의와 책임감있는 모습이 많이 늘어난 점.

〈밤 11시를 넘긴 국정감사〉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산회시간
10.4	정무위	국무총리실	23시 21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문화체육관광부	24시 00분
	환경노동위	환경부	23시 05분
	국토해양위	서울국토관리청	23시 59분
10.5	교육과학기술위	교육과학기술부(교육)	23시 56분
	환경노동부	고용노동부	23시 05분
10.6	교육과학기술위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	24시 22분
10.11	정무위	금융감독위원회	23시 23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23시 53분
	국토해양위	국토해양부	23시 59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파행으로 인해 지연된 것임 (낮에는 종일 파행하였음)

3. 지난해에 이어 각종 ‘게이트(비리의혹 제기)’보다는 민생·정책에 치중함

이번 국감에서는 국무총리실 사찰의혹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증인들이 불출석하였고, 대통령 조카사위의 제4이동통신사 ‘먹튀’의혹·장관조카 특혜입사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민생, 정책관련 정책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4. 정당의 주요당직자와 다선의원들까지도 국감에 열심

18대 국회에 들어 정당의 주요당직자나 다선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 참여하여 열띤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조선같은’ 중진의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주요 당직자들도 국정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하여 정당국가화 우려를 불식하며 정당의 당직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대표임을 보여 주고 있는 점.

5. 공정한 사회 구현 노력—불공정·비리·특혜 질책·대안제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크게 조명되었으며, ‘그랜저 검사’로 상징되는 불공정한 ‘감싸기’ 현실, ‘꽃돼지’로 표출되고 있는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취업, 그리고 장성 아들들의 편한 군생활 등 국민들에게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절히 조명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VII 더욱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한 개선 제안

(감사원의 국회소속으로의 이전 등 8가지 매년 지속 주장하는 내용은 생략함)

1. 자료제출 및 요구에 대해 법제화하자

자료 제출이나 요구에 있어서 피감기관과 감사위원간의 갈등이 매년 빚어지는데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자료제출 의무사항을 법제화하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내용으로 거부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 외통통위의 해외국감은 예산낭비 말고 평시 또는 화상국감으로 하자.

대부분 중진의원으로 구성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해외국감은 격년제로 화상국감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3.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업무보고시 정례화하자.

위원회에서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은 다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여 매년 중복되는 질의를 예방하도록 해야 함.

4. 모든 국감내용은 영상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심있는 국민이나 필요한 기관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반드시 시행되어야 (문서 국감 속기록을 신속히 올려 놓는 것도 필수적임)